

인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5. 4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8
IV. 국제신인도	10
V. 종합 의견	11

I. 일반개황

면적	3,287천km ²	G D P	2조 495억 달러 (2014년)
인구	1,260백만 명 (2014년)	1 인 당 GDP	1,627달러 (2014년)
정치체제	연방공화제	통화단위	Rupee
대외정책	비동맹 중립	환율(달러당)	61.03 (2014년 평균)

-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으로,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자립지향적 수입대체형 경제체제를 유지해왔으나 1991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유화 및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.
-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변화된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, 영어 구사능력과 숙련된 기술을 겸비한 저임노동력이 풍부하고 IT 산업의 경쟁력이 높음.
- 석유, 가스, 석탄 등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생산량이 수요에 크게 못미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- 인도는 북쪽으로 파키스탄,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, 파키스탄과 카슈미르 지역, 중국과 잠무-카슈미르,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 ^e
경제성장률	10.3	6.6	5.1	6.9	7.2
재정수지 / GDP	-8.4	-8.1	-7.5	-7.2	-7.2
소비자물가상승률	9.5	9.4	10.3	10.0	6.0

자료: IMF.

□ 신정부 출범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경제성장세 회복

-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, 과세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와 부정부패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,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증가세 급락 등으로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2012년에는 5.1%를 기록함.
- 2013년에는 농업 생산량 증가와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6.9%로 회복되었고, 2014년에는 물가상승 압박 완화, 모디 총리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7.2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□ 긴축적 통화정책,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.0%로 하락 추정

- 인도 소비자물가는 기후조건에 따른 식료품 및 농산물 가격과 연료 가격, 루피화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음. 2012년에는 농산물 최저가격 인상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.3%를 기록함.
- 연료보조금 축소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, 루피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량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,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.0%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.
-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,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.0%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.

□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지속

- 비효율적인 조세제도 및 낮은 소득세 징수율로 인한 세수 부족, 연료 및 식료품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선심성 정책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인하여 인도의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임.
- 2012년에는 식료품 및 연료 보조금 지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지출이 감소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7.5%를 기록함. 2013년에는 GDP 대비 세수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통신 주파수 매각 등을 통한 재정수입 증가와 연료보조금 축소 등으로 동 비율은 7.2%를 기록하였음.
- 2014년에는 유가 하락으로 전체 보조금의 25% 가량 차지하는 연료 보조금 지출이 감소하였으나, 식료품 보조금 지출 증가와 공기업 지분매각 지연 등으로 동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7.2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 -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2년 5.1%, 2013년 4.8%, 2014년 4.4% 등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, 현 정부는 지출관리위원회 (Expenditure Management Commission) 설립을 통해 재정지출 관리에 힘쓰고 있음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과도한 공공채무로 인해 경제·사회 인프라 투자 제약

- 각종 보조금 정책 및 부실 공기업 지원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인도의 2014년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65.0%에 달하여, 태국(47.2%), 중국(41.1%), 필리핀(37.2%), 인도네시아(25.0%)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임.
 - 2013년 공공채무의 이자비용은 전체 정부수입의 20%를 상회하면서 경제·사회 인프라에 대한 정부투자를 제약하는 형편임.
 - 다만, 공공채무의 약 94%가 국내기관 앞 발행한 현지화 표시 채무이며 평균만기가 약 9년에 달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은 크지 않은 편임.

□ 비효율적인 농업 분야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

- 농산물 공급부족 및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식료품 도매물가 상승률은 2005년 이후 매년 7% 이상을 기록하였음.
 - 인도의 농업은 대부분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어 강우량의 몬순시기 집중 및 지역별 편중, 증발량 등에 따라 작황이 좌우되고 있음.

- 세계최대 농지보유국인 반면 농업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약 60%에 달하여 농가당 경지면적은 매우 낮은 편이며, 종사자 대부분이 극빈층에 해당되어 민간자본투자에 한계가 있음.

□ 관료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만연

- 인도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 조항을 갖추고 있으나, 관료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
- 인도 중앙조사국(CBI)에 따르면 2013년 1월에서 11월까지 583건의 부정부패 사건이 등록됨.
- 국제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)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(Corruption Perceptions Index)에서도 인도는 조사대상 174개국 중 85위로, 필리핀, 스리랑카, 태국과 같은 순위를 기록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보유

- 인도는 약 12억 명(세계 2위)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2014년 GDP(2.0조 달러, 세계 9위)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58%로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음. 향후 중산층 인구 급증*으로 내수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
- * 2013년 1.6억 명 → 2015년 2.7억 명 → 2025년 5.5억 명
- 또한, 생산가능인구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각각 65.2%, 29.3%인 반면,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5.6%에 불과하여 인구구조상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예상됨.

□ 다변화된 산업 구조와 높은 저축률 및 투자율 지속

- 2013년 인도의 산업별 비중은 농업 16.9%, 제조업 17%, 서비스업 66.1%로 서비스산업 중심의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. 특히, IT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음.
- IT 산업은 총수출의 25%를 차지하며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콜센터 등 세계 IT 아웃소싱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.
- 한편, 2014년 인도의 저축률과 투자율은 각각 GDP의 30.0% 및 31.5%를 기록하여 인도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음.

□ 낙후된 인프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

- 도로, 항만, 전력, 통신부문 등 낙후된 인프라는 인도 경제성장의 저해 요소로 지적됨.
 - 세계경제포럼의 2014-15년 세계 경쟁력지수(Global Competitiveness Index)에서 인도의 인프라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87위 수준인데, 특히 전력공급의 경우 103위를 기록함.
 - 발전시설 노후화로 인한 전력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2012년 7월말 대규모 정전사태(blackout)가 발생한 바 있음.
- 인도 정부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(2012~2017년)에서 약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했으나,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토지수용의 어려움, 복잡한 규정, 관료부패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음.
 - 2014년 말 정부 추진 인프라 공사 738건 중 43%에 해당하는 315건이 지연되었는데, 지연사업 중 도로 분야(31%)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력(20%), 석유(14%), 석탄(11%), 철도(11%) 분야가 그 뒤를 이음.

다. 정책성과

□ 금 수입 제한 조치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폭 다소 완화

- 2013년 인도중앙은행은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인 금 수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폭 완화를 꾀하였음.
 - 4차례에 걸친 금 수입 관세율 인상(2% → 10%), 수입된 금의 20% 재수출 전까지 추가 금 수입 금지, 시중은행의 금 구매 대출 규제 등을 시행함.
- 2012/13 회계연도에는 금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11%인 538억 달러를 차지하였으나, 정부의 수입 규제에 따라 월평균 금 수입액이 약 75% 감소하며 2013/14 회계연도 금 수입액은 전년 대비 46% 감소한 289억 달러를 기록함.
 - 금 수입 감소,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축소되자 인도 당국은 2014년 4분기 중 금 수입 제한 조치를 철폐하였음.

□ 모디 정부, 친시장적 개혁·개방 정책 실시

- 친시장적 정책을 표방하는 모디 정부는 관료주의 개혁과 경제 회생을 강조하며 각종 개혁 정책 및 규제완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함.
 - 재정 건전화와 에너지 시장 자율화를 위해 경유가격에 대한 정부 통제 및 보조금 지원을 철폐하고 국내 생산 천연가스 가격도 인상하였으며, 노동 분야의 공정성 강화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동부 감독관들의 재량을 축소하고 관련 서류의 통합과 온라인 등록을 추진하기로 함.
 - 또한, 스마트시티*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분야의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 목적으로 납입자본금, 용적률, 택지 규모 및 투자 회수 조건 등을 완화하여,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 - * ICT, 주택, 교통, 전력, 위생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로, 2014년 인도 총선 시 모디 총리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100개 건설을 공약함.
-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5년 1월중 섀넥스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, 對인도 2014년 FDI 금액이 전년 대비 31% 증가한 28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.
 - 2014년 중 약 1조 루피(약 160억 달러 상당)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순수입되면서 주가지수 상승을 견인함.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 ^e
경 상 수 지	-54,516	-62,518	-91,471	-49,226	-27,377
경상수지/GDP	-3.2	-3.3	-4.9	-2.5	-1.3
상 품 수 지	-129,176	-167,449	-201,666	-162,577	-143,129
수 출	230,966	307,836	301,853	319,719	329,633
수 입	360,142	475,285	503,519	482,296	472,762
외 환 보 유 액	275,277	271,285	270,587	276,493	316,238
총 외 채 잔 액	331,663	354,561	398,850	436,053	469,452
총외채잔액/GDP	18.3	18.7	21.3	22.5	22.6
D. S. R.	5.6	6.0	6.3	5.4	5.9

자료: EIU, IIF.

□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빠르게 개선

- 섬유와 농산물 수출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제조업 기반, 상품수입의 약 45%를 차지하는 석유와 금 수입,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 수요 등으로 만성적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IT 서비스 수출과 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에 따른 서비스 수지와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계속됨.
- 2012년에는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,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악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4.9%까지 확대되었음.
- 2013년에는 루피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, 연료보조금 축소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감소, 금 수입관세 인상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391억 달러로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흑자도 47억 달러 증가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.5%로 감소하였음.
- 2014년에도 루피화 약세에 힘입은 수출 확대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194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수지 흑자도 56억 달러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1.3%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.

□ 정부의 적극적 외채관리로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유지

-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2년 21.3%를 기록한 이후 2013년과 2014년 약 23%를 기록하여 태국(37%), 필리핀(28%), 인도네시아(35%) 등 인접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2013/14 회계연도 중 비거주자예금(Non-Resident Indians Deposit) 증가*로 인해 총외채잔액이 증가하였으나, 수입규모 감소에 따른 무역관련 지불액 감소로 단기외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.
 - * 총외채 대비 비거주자예금 비율은 2011년 비거주자예금 금리 규제 완화 이후 2012년 3월 16.2%에서 2014년 3월 23.6%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임.
- 인도 정부는 총외채의 약 80%를 차지하는 상업차입에 대해 자금용도, 금리, 만기 등을 규제하며 적극적으로 외채를 관리하고 있음.
- 한편, 원리금상환비율(D.S.R.)도 6% 이내로 양호한 수준이며, 인도의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2년 5.2개월에서 2013년 5.9개월, 2014년 6.4개월로 5개월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(BJP) 정권 출범

- 2014년 5월 실시된 제16대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이 여당인 국민의회당(INC)을 제치고 하원 의석 543석 중 282석을 차지하며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룸.
- 낮은 경제성장률,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외국인투자 감소, 루피화 가치 하락 등으로 기존 정권에 대한 불만감이 고조된 가운데 인도 구자라트 주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됨.
- 다만, 여당이 상원 의석의 18%만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 개혁법안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, 지방정부가 발달한 인도 특성상 향후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임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로 사회불안 미미

- 다양한 종교, 민족, 언어와 높은 소득격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의식, 인내와 관용의 국민성이 인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구조를 포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.
- 한편, 카스트제도는 공식적으로 이미 철폐되었으며 동 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. 그러나 종교와 함께 많은 인도인들이 동 제도를 여전히 숙명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인도의 사회 안정 유지에 일조하고 있음.

□ 공산반군에 의한 빈번한 폭력사태 발생

- 인도 중동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낙살라이트(Naxalite)로 불리는 인도 마오주의 공산반군들의 폭력사태가 자주 발생함.
- 2013년 1,129건의 낙살라이트 폭력사태로 인해 3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, 2015년 4월 중에는 반군의 공격에 의해 최소 13명의 경찰이 사망하였음.
- 인도 정부의 진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오주의 공산반군은 빈곤 지역 위주로 활동하면서 인도 하층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정부의 반군 근절이 어려운 상황임.

3. 국제관계

□ 실용주의적 대외관계 노선 추구

- 인도는 성장잠재력과 대규모 내수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국의 실리를 확보하고 모든 국가와 긴밀한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 실용주의적 대외관계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.
- 남아시아지역협력체(SAARC) 결성을 주도하였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일본, 독일, 브라질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음. 이와 더불어 다양한 협력기구 참여 등을 통해 자국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.

□ 카슈미르 지역 분쟁 등으로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은 불투명

- 파키스탄과 인도는 1947년 분리 이후 카슈미르 지역 영토 분쟁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데, 2014년 10월, 2015년 1월 등 카슈미르 지역에서 교전이 계속되는 등 모디 정권 출범 이후에도 양국간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음.
- 신임 총리 취임식(2014년 5월)에 파키스탄 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등 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, 이후 주인도 파키스탄 대사와 카슈미르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들간 회동을 이유로 양국간 외교차관 회의가 취소되는 등 모디 정부가 강경 노선을 취함에 따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.

□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관계 속에서 경제적 실리 추구 병행

- 인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으로, 서북부 잠무-카슈미르,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총연장 4,000km에 이르는 지역의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.
- 2012년 12월에 개최된 국경선 확정을 위한 제16차 고위급 회담, 2014년 9월 시진핑 주석의 인도 방문 시에도 큰 진전이 없었으며 최근 인도가 접경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등 간헐적으로 영토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.
- 2014년 9월 양국 정상회담시 양국은 철도사업 협력, 무역 및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12개 협정문에 서명하는 등 실리적인 측면에서 경제협력 관계를 병행하는 양상을 보임.
- 중국은 향후 5년간 인도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여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의 인도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의 간접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단기적 유동성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황

- 채무재조정 경험이 없으며,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3.1배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율도 19.7%로 2013년 대비 0.8%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어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.
- 다만, 신규 도입한 민간채무의 평균만기가 2011년 7.6년에서 2013년 5.5년으로 감소하면서 신규 도입한 외채의 평균만기가 2011년 19.1년에서 2013년 13.7년으로 감소하여 외채구조가 다소 악화되었음.

2. 국제시장평가

주요 신용평가기관은 투자적격 등급 부여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	종전 평가 등급	
OECD	3등급	(2014. 6.)	3등급	(2013. 6.)
S&P	BBB-	(2014. 9.)	BBB-	(2012. 4.)
Moody's	Baa3	(2015. 4.)	Baa3	(2013. 9.)
Fitch	BBB-	(2015. 4.)	BBB-	(2014. 4.)

- S&P, Moody's, Fitch는 각각 2004년, 2006년, 2007년에 인도에 부여한 최하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
- Moody's는 인도의 최근 정책이 경제 성장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여 2015년 4월 신용등급 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 조정함.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국교수립 : 1973년 12월10일 (북한과는 1973년 12월 10일)

- **주요협정** :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(1974년), 과학기술협력협정(1976년, 2006년 개정), 이중과세방지협약(1986년), 투자보장협정(1996년), 세관협력협정(2006년),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2009년 체결, 2010년 1월 발효), 민간원자력협력협정(2011년), 사증절차간소화협정(2012년)

□ **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**

<표 4> **한·인도 교역 규모** 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2	2013	2014	주요품목
수 출	11,922	11,376	12,782	철강관, 무선통신기기, 자동차부품
수 입	6,921	6,180	5,275	석유제품, 식물성물질, 알루미늄
교역규모	18,843	17,556	18,057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인도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 체결국으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8위 수출 대상국임. 2014년 대인도 수입은 석유제품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% 감소하였으나, 철강관과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각각 전년 대비 26%, 175% 증가하면서 대인도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함.
- 우리나라의 대 인도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12월말 현재 36억 6,612만 달러(투자누계 기준, 신규법인 수 755건)를 기록하고 있으며,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(85%)과 도매 및 소매업(6%)임.

V. 종합 의견

- 정책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심리 저하,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부진등으로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, 물가상승 압박 완화와 정권 교체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2014년에는 7.2%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음.
-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세수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료보조금 축소와 통신 주파수 매각 등으로 7.2%를 기록하였으며, 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 보조금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보조금 지출 증가 및 공기업 지분매각 지연 등으로 2014년에도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.

- 보조금 축소에 따른 연료 가격 현실화, 금 수입관세 인상 등으로 2013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.5%까지 축소되었으며, 2014년에도 수출 확대와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동 비율은 1.3%로 더욱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

- 친기업 성향의 모디 신정부는 출범 이후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정국 운영을 하고 있으나, 인도 상원 내 여당의 열악한 입지가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
- 경제규모 대비 낮은 외채비중,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조사역 송 용 원 (☎02-6255-5705)
E-mail: song@koreaexim.go.kr